경기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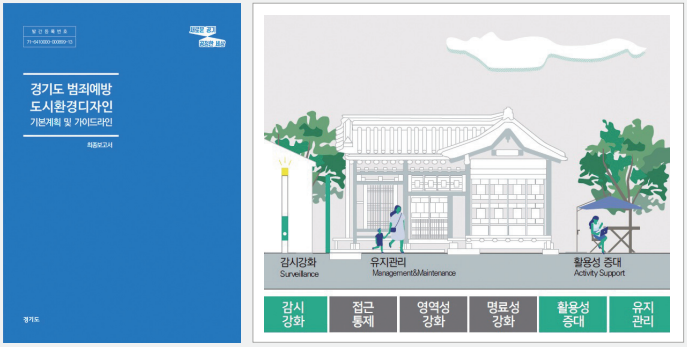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디자인정책팀
2020. 3. 8.
2020. 3. 27.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경기도는 원도심 범죄유발 상황을 줄이기 위해 진행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였다. 이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6조에 의한 것으로, 2013년에 수립한 안내서와 2015년에 수립한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종합계획'을 보완하였다. 이번 용역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진행되었다.

셉테드(CPTED) 기법을 적용하고 농촌·어촌·도시 등 다양한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이번 용역의 결과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과 학교·청소년 시설 등의 낡은 담장 개선 및 골목길 조명 확충, 방범용 CCTV·비상벨·방범창 설치, 공원·공터·빈집 정비 등에 적용된다.

경기도는 향후 매년 31개 시·군 중 5곳을 공모해 진행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도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계획이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좌) 셉테드(CPTED) 6대 원칙(우)
출처: 경기도. (2020).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3월 8일 보도자료.

수원시 매산동 등 5개 지역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경기도는 올해 도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예산 25억 원을 들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희망지역을 접수하였으며 '안전취약 수준', '주민참여 의지', '사업내용 타당성', '표준모델로의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사업대상지 5곳을 선정하였다.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외국인 밀집지역인 '수원시 매산동'과 노후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하고 기반시설이 취약한 '용인시 마북동' 외에 '이천시 창전동', '구리시 수택동', '가평군 청평면' 등으로, 주민과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환경특성 분석을 통한 기본설계 등을 추진한다. 특히 설계부터 공사까지 모든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하게 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은 경기도가 2014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2~5곳을 선정하였으며, 현재까지 예산 125억 원으로 총 26곳에 사업을 진행하였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양주시 봉암리 일대에서 진행한 사업의 경우 폐가 21채를 철거하고 도로와 담장, 조명,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새롭게 정비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79% 감소시킴으로써 주민만족도 96%의 결과를 얻는 바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내 취약지역, 외국인 밀집지역, 여성안심구역 등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전(좌)·후(우)
출처: 경기도. (2020). 도, 수원시 매산동 등 5개 지역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3월 27일 보도자료.